

民, 32년만의 상임위원장 ‘씩씩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17개 상임위 일제히 가동
정보위 제외 11개 상임위원장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선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29일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원구성 법정시한은 이날 8일까지였다.
여야 협상 최종 결렬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기로 하면서 29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등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지난 1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한 데 이어 2주만에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쳤다. 국회 사무총장에는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는 4선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운영위원회에는 관례대로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연 의원(4선)이 선출됐다. 이외에 △정무위원회장 윤관석 의원(3선) △교육위원회장 유기홍 의원(3선) △과학기술위원회장 박광온 의원(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이계호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도종환 의원(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송옥주 의원(재선) △국토교통위원회장 진선미 의원(3선) △여성가족위원회장 정춘숙 의원(재선)이 각각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과 진선미 의원, 이계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갔으며,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했던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 배치됐다. 재선 의원 2명도 상임위원직을 맡게 됐다.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 181명 가운데 김태연·윤관석·서영교·이계호·진선미·정성호 의원이 180표를 얻었으며, 박광온·송옥주·도종환·정춘숙 의원 179표, 유기홍 의원 177표로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경

제, 북한 관련 외교안보 분야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15일 법사위(윤호중 위원장), 기재위(윤호중 위원장), 외교통일위(송영길 위원장), 국방위(민홍철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학영 위원장), 보건복지위(한정애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먼저 처리했으며, 이어 나머지 11개 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정해져야 협의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이 선출은 미뤄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을 감안하면,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32년 전인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가 마지막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의 산회 후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해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본회의 직후 열리는 상임위는 △법사위 △기재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원회 △산자위 △농해수위 △과방위 △문체위 △여가위 △행안위 △정무위 △운영위 △교육위 등이다.
민주당은 통합당 참여 없이도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밤을 새우더라도 심사를 마쳐 이번 회기 내인 오는 3일 본회

의를 열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 소관 정부 부처에도 국회 인근 대기령을 내렸다.
한편 단독 원구성 사태를 피하기 위해 5번이나 원구성 시한을 연기하며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중재해는 박병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오늘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지 꼭 한달이 된다. 그러나 개원식도,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정 총리 “3차 추경, 적기투입...V자 반등 이뤄야”

반세기 만에 3차 추경...35.3조 ‘역대 최대 규모’
“21대 국회, 의원입법 규제심사 도입해야” 촉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국회에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가 V(브이)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2020년도 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에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편성된 3차 추경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지출 23조 9000억원과 세입부족 예

상분에 대한 보전 11조 40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추경안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000억원, 국제발행 23조 8000억원으로 마련했다.
정 총리는 세계경제 침체와 국내 경제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는 우선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40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1조 9000억원,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3조 1000억원 등이다.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예

산 9조 4000억원과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보강 3대 패키지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 7000억원 △K-방역과 재난대응 시스템 보강 2조 5000억원 △한국판 뉴딜 5조 1000억원이다.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원, 고용안정화에 5조원 등 총 31조 3000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2조 7000억원) 사업에서는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한다. 도서·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그린 뉴딜에는 1조 4000억원을 반영해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김윤호 기자

문대통령 “日 수출규제, ‘강한 경제’ 길 열어”

수석보좌관회의 주제...“의존형 경제 탈피 자신감 갖게 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단행 1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지난 1년 우리는 기술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30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뒤 같은 해 7월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의 핵심소재인 스피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생각이 못된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단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